청 원 서

수신자 : 논산시의회의장
제　목 : 양촌면 임화리 대량살상무기 폭탄공장 관련
청원인 : 대표청원인 배용하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위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8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청원서 1부.　끝.

청원인
주소 :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매죽헌로1176번길 8-54
성명 : 배용하　(사인)
외　1,006 명(연서자명부 따로붙임)
전화번호 : 010-6406-1409
소개의원 :　서승필　(사인)

청 원 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양촌면주민대책위원회(양촌지킴회)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양촌면 주민대책위원회와 논산시민대책위원회는 공동으로 시 의회에 아래와 같은 의혹과 탈법 편법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하게 모든 의혹을 밝히기를 촉구한다. 논산시와 양촌면장은 15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단체를 불순세력으로 몰면서 정작 시민과 양촌면민을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는 폭탄공장이 아니라는 왜곡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선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을 이간질시켰으며 청정지역 양촌에서 오래도록 주인이었던 주민들과 천연기념물 등은 배제되었다. 논산시의회는 논산시민의 엄중한 요청에 반응하여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

1. 개요

- 백성현 논산시장이 2022년 7월 취임 직후, 국방산업 유치를 내세우면서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 논산 입주를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으로 강행하고 있음.
-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확산탄금지협약에 의해 금지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인 확산탄(집속탄) 생산업체임.
- 입주 업종은 <u>"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u>으로, <u>하루 430kg의 화약류가 반입되어 1일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는 등 위험물 처리 및 저장소를 건설하는 것임.</u>
- 논산시는 양촌면장과 양촌면의 일부 지도자들을 동원하여 <u>공장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하고 주민을 속이면서 부지 쪼개기와 핵심시설 알박기, 지표조사 전 원지형 훼손, 형식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편법·탈법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비호와 초고속 인허가 등의 특혜를 통해 공장 입주를 강행</u>하고 있음.
- 논산시민단체가 반대시민대책위를 2022년 12월에 꾸려서 반대활동을 하며 900여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2024년 1월에는 양촌면주민대책위(양촌지킴회)가 꾸려져서 활동을 시작하여 진실을 알리고 있음.

2. 한화가 떼어낸 '혹',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한화가 확산탄 생산을 이유로 투자금지 대상기업으로 지정되어 차세대 주력사업인 태양광사업의 유럽 진출에 지장을 받자, 확산탄 사업을 분리하기 위해 2020년 11월에 설립한 업체임.(대표이사 : 정정모 한화 상무 출신).
-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한화의 사업 확장에 걸림돌이 된 혹을 떼어낸 결과물.

3. 국제협약으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확산탄

- 확산탄은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기 위해 하나의 모탄 안에 수십~수백 개의 자탄을 담은 탄약으로, 대표적인 무차별적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임. 목표 지점 상공에서 비처럼 뿌려진다고 해서 '죽음의 비'로 불림.
- 확산탄의 피해대상은 군인이 아니라 주로 민간인임. 확산탄으로 인한 사상자의 95%가 민간인이며 이 중에서 71%가 어린이임.(『Cluster Munition Monitor 2023』, Cluster Munition Coalition, 2023.8.3.).
- 이 같은 비인도성 때문에 국제사회는 확산탄을 금지하는 협약(확산탄금지협약, 2010년 발효)을 맺어 생산과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
- 그러나 국방연구원의 국방획득연구센터 하광룡, 박지원 연구원은 "확산탄금지협약의 가입 여부를 떠나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확산탄 사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무시한 독단적인 확산탄 정책을 펼칠 경우 국제사회의 비난과 함께 국가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며 "확산탄 사용 국가는 확산탄금지협약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확산탄에 의해 국제관습법이나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때에는 국가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음(『국방논단 제1434호』, 「확산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우리의 정책방향」, 2012.10.29.).

-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95385&CMPT_CD=SEARCH 참조

4. 위험물 처리 및 저장 집합소,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논산 공장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계열사로 보이는 '케이디솔루션(주)' 명의로 진행한 확산탄 논산공장 건설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논산시 양촌면 임화리 306-2번지 일원, 306-4 일원)에 따르면, 논산 공장의 업종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업종분류번호 : 25200)"임.
- 이 공장에는 하루 430kg의 화약류가 반입되어, 1일 14,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하고, 이를 활용하여 무유도 탄두(모탄)을 1일 24발(자탄 각 500발 추정) 생산함.
- 이를 위해 위험물 취급소인 자탄충전공실, 자탄조립공실, 위험물저장소, 탄두제조소, 자탄취급소, 고폭저장소 등을 건설하고 있음.
-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공개>(2023. 11)에 따르면 "업종 특성상 안전을 위하여 폭약 저장고 등 건축물간 필요 이격거리에 맞춰 공장, 창고 등 배치. 지원시설, 저류시설, 공원 등 비화약 취급 시설을 우선 배치하여 주변 민가와의 안전거리 최대 확보"라고 적시. 이는 이 시설이 폭발과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협의내용에 따르면 "보관물질의 폭발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험물 폭발 방지대책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하루 430kg의 화약류가 거의 매일 반입되고, 1개당 500발의 자탄이 담긴 탄두가 저장되고 반출되는 경로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한다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여 양촌면 이외의 논산시민

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 화약(COMP-A5)은 여수에서 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일 이러한 고폭성에 민감한 화약이 여수에서 양촌면 임화리까지 이동하게 됨. 논산IC나 연무IC나 양촌IC가 최종 이동 통로이고 이곳에서부터 임화리 폭탄공장까지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가나 농지를 지나가게 됨. 또한 완성된 탄두를 이동할 때의 동선도 양촌면과 논산, 계룡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매일 반입하는 화약 말고 상시보관용으로 화약이 최소 20톤이상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저장고가 있음. 이리역 폭발사고의 폭약이 30여톤이었으며 사방 2키로 안에 건물이 파손되고 1400여명의 사상자가 났으며, 7천명이 넘는 이재민이 생긴 폭발사고였음. 이에 비해 고폭성민감화약은 그 폭발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살상용 폭탄에 사용하는 것으로 사고시 그 위험성은 상상할 수 없음.

1. 양촌면 임화리 306-2번지 일원 공장 신축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주요 부분

- 건축계획 : 위험물 취급소인 자탄충전공실, 자탄조립공실, 위험물저장소 등.
- 생산설비 : 자탄 충전기, 자탄 조립기 등
- 원료 사용량 : 하루 430kg의 화약류와 14,000셋트의 자탄금속체 입고
- 제품 생산량 : 하루 14,000발(연간 3,360,000발)의 무유도 자탄을 생산.

2. 양촌면 임화리 306-2번지 일원 위험물저장 침 처리시설 및 도로개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중 주요 부분

1) 기허가지 1단지(975번지 등)
- 건축계획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신관취급소)
- 제품 생산량 : 외부에서 반제품(위험물, 군용화약류)를 입고하여 신관 조립체 하루 580개(연간 140,000개)

2) 금회신청지(306-4번지 등)
- 건축계획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탄두제조소, 자탄취급소, 고폭저장소)
- 생산설비 : 탄두 LAP 자동화 장비(자탄 제조용), 자탄 측정장비(자탄 측정용) 등
- 원료 사용량 : 자탄 완성품 하루 12,000발(연간 3,168,000발), 탄두 외피 및 화공품(CCB)-외부제작 완성품 24개 등
- 제품 생산량 : 무유도 탄두 하루 24발(연간 6.336발)

3. 종합

- 306-2번지에서는 하루 14,000발의 무유도 자탄 생산
- 기허가지 1단지(975번지 등) 등에서는 신관 조립체를 하루 580개 생산
- 금회신청지(306-4 등)에서는 306-2 공장에서 생산한 자탄 완성품을 하루 12,000발 입고하여 무유도 탄두를 하루 24발 생산하는 것으로 보임.

5. 논산시의 위험 은폐·주민 기만

- 논산시는 이 공장이 위와 같이 위험물을 취급하고 저장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논산시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 이 때문에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논산시가 그간 폭탄공장을 유치하면서도 면장과 일부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주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것에 분노하고 있음.
- 논산시는 이 업체가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을 수행하는 업체라는 사실을 논산시민에게 밝힌 적도 없음. 오히려 논산시가 오인환 충남도의원에게 보고한 자료(2023. 7)에 따르면 "국방산업장비 생산"이라는 업종분류에도 없는 모호한 표현으로 이를 은폐하고 있음.
- 백성현 논산시장은 이 업체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시민들을 "좌파"라고 색깔론을 동원하여 비난하면서 "북한 핵보다 안전하다", "북한 핵부터 없애라고 해라", "논산은 어차피 타격대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이 업체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호도하는 데 몰두해 옴.
- 논산시는 이 업체의 고용효과가 500명이라고 주장.(최근에는 주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1,000명이라고 부풀림) 그러나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KDind)는 2023년 9월 27일, 양촌면 주민설명회에서 '종사자가 150명 정도여서 경제효과가 크지 않고, 고용효과도 지역에 젊은이가 적어서 크지 않다'고 밝힘. 나아가 핵심시설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근무인원이 80명에 불과. 채용정보 사이트인 '사람인'에 따르면 이 회사(본사, 대전공장, 구미공장, 연구소/개발지원실) 종사자를 다 합쳐도 266명에 불과. 이는 논산시가 고용효과를 얼마나 부풀리고 있는지를 증명.
- 논산시는 양촌면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여러 업체가 입주할 것이라고 주장. 그러나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의 <양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공개>(2023. 11)에 따르면 "단일 업종 100% 사용"으로 되어 있음. 이 역시 논산시가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단일 업체가 입주하는 데도 여러 업체가 입주하는 것처럼 부풀려 주민을 기만한 것임.
- 논산시는 지금도 주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주민대책위의 여러 활동에 대해서 기자들과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감시하고 압박하는 등 폭압적 방식으로 문제를 은폐하고 무마하려 하고 있음.

6.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전 원지형 훼손하여 위법 소지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르면, 3만제곱미터 이상(시행령 제4조 ① 1)의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시행규칙 제3조)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함.(시행령 제4조 ①)
- 그런데, <논산 임화리 306-6번지 일원 양촌 국방(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2023. 12)의 조사단 의견에 따르면, "구릉 사면 말단부와 곡간부 경작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건축행위가 진행되고 있어 원지형 대부분이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8쪽)고 적시하고 있음.(6쪽 도면 참조 : 녹색 표시지역이 원지형 훼손 범위(위 자료 36쪽 도면))

- 이는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케이디솔루션을 내세워 부지를 쪼개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결과로 보임.
- 원지형 대부분을 훼손한 이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①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지표조사의 실시시기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동 법률 시행령>** 제4조(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 면적이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를 포함한다. 1. 토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매장문화재 유존지역과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제3조 관련)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완료 전

【도면 12】조사결과 및 시굴조사 필요범위도(S=1:7,000)

7. 논산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을 개인 기업에 몰아주는 온갖 특혜

백성현 논산시장은 폭탄공장 착공식과 시민단체와의 면담은 물론 수많은 단체의 모임에서 자신이 직접 사장과 다시면 땅을 구입하는 것을 도왔고 땅값이 오르면 기업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구입을 다 한 뒤에 협약을 맺고 발표했다는 말을 자랑스럽게 한 바 있음. 주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해서 행사해야 할 당연한 권리를 시장이 기업의 편에 서서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한 것임.
또한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으로 폭탄공장을 위해 도로를 내 줄 수 있다고 하거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초스피드로 인허가를 내주게했다고 공언한 바 있음. 일반산업단지로는 도와 중앙정부의 인허가를 받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절차에 최소한 몇 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시장 권한으로 모든 인허가를 주기 위해서 유령회사를 만들어서 같은 부지에 두 개의 다른 주체가 공장허가를 신청하게 하여 그 어렵다는 고폭위험물저장소와 폭탄공장 인허가를 초스피드로 내준 바 있음. 일반산업단지를 신청해 놓고 그 사이에 논산시는 단일 회사로 폭탄공장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나서서 해결해 준 모양새임. 모든 인허가 절차는 시민의 안전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준 권한이지만, 논산시장은 이 권한을 주민에게 보은과 대전에서 여러 차례 폭발사고로 사람이 죽고 산을 불태운 폭탄공장을 몰래 선물하는 식으로 행사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에는 2015년 산사태와 토사유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사방댐을 시가 나서서 지정해지한 바 있음. 사방댐 이후 안전했던 지역에는 사방댐이 없어진 후에 산사태와 토사 유입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주민을 위해 만든 사방댐을 일개 기업을 위해 나서서 해제해주는 행정을 당장 멈추고 주민에게 물으라! 시행정은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일개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비무기국방산업단지 기조와 무관한 폭탄공장을 마치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무기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멈추고 논산시민의 안전만을 생각하면서 시정을 운영하라!

8. 해당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을 무시한 졸속 인허가 배경

해당 지역은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와 담비와 참매가 발견되는 곳이며 삵과 원앙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은 단 한 명도 만나지 않은 채 동식물들의 휴지기인 3월에 단 3시간 현장을 다녀간 것으로 수백 년을 산 이곳의 진짜 주인인 동식물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함.

금강유역환경청은 두번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작성된 서류 심사로 평가서를 통과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그 넓은 지역을 단 ,2-3명의 인원이 현장을 다녀와서 쓴 보고서에서 그 문제점을 찾지 못한 무능함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함.

9. 부지 쪼개기, 핵심시설 알박기, 형식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초고속 인허가 등 논산시의 각종 특혜 의혹

-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현재 254,824㎡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신청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100% 단일 업종임.
- 그런데 연접한 부지 일부에 ‘케이디솔루션(주)’가 임화리 306-2번지 일원 18,486㎡ 규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2023. 4. 21), 공사를 착공(2023. 7. 4)하여, 곧 준공을 예정(2024. 4)하고 있음. 또한 임화리 306-4 일원 9,351㎡ 규모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2023. 6. 30)하고, 공사 착공(2023. 7. 20)하여, 곧 준공을 예정(2024. 4. 30)하고 있음.
- 그런데 이 곳 입주 업종도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험물 처리시설(자탄, 신관, 탄두 등) 및 고폭 저장시설 등이 이미 건설되고 있음.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254,824㎡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가동하고자 하는 핵심시설이 일반산업단지 지정 절차와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건설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는 사업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4계절에 걸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지를 잘게 쪼개서 짧은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내고 이 부지에 핵심시설을 알박기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건축행위를 진행하여 원지형 대부분을 훼손하기까지 함.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는 정체 불명(홈페이지도 없고, 취업사이트 검색도 안 됨)의 '케이디솔루션(주)'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 회사가 법망을 피하여 핵심시설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1년 안팎의 시간을 절약하고, 위험시설 건설을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탈법 논란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됨.
-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부지 쪼개기와 핵심시설 알박기, 형식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지표조사 전 원지형 대부분 훼손 등의 온갖 꼼수를 자행한 데는 논산시의 적극적인 사주·협조·지원·방조·비호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백성현 논산시장이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유치에 발 벗고 나서면서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다는 것은 논산시민이 다 아는 사실. 논산시의 전례없는 초고속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비호와 특혜가 없었다면 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가 감히 이 같은 편법·탈법 또는 불법행위를 버젓이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임.

2024. 2. 6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반대 시민대책위원회 대표 배용하
양촌지킴회(폭탄공장반대양촌면주민대책위) 위원장 이광재

이익은 불투명, 국제적 망신은 확실!

양촌의 미래? 주민이 떠나고 경제는 파탄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한화가 왜 폭탄공장을 매각했을까요?

• 유엔이 금지한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도 국제사회에서 사업할 수 없습니다.

비인도적 무기 생산 사기업에 논산시가 특혜를?

폭탄공장은 논산시민의 이익과 무관한 공장임을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논산시장은 왜곡과 거짓말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폭탄공장 관계자의 말

"우리 회사가 만드는 포탄 안에 비인도적 살상무기가 있다." 폭탄공장 실무자 / 9월 27일

"지역의 경제효과는 크지 않고 젊은이가 적어서 고용 효과 미미하다." 폭탄공장 실무자 / 9월 27일

"논산시의 방위산업 유치 및 발전,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논산으로 결정했다." 폭탄공장 대표이사 KBS 뉴스

"땅 값이 오를까봐 사전설명회 공청회 못 했다." 폭탄공장 실무자 / 9월 27일

백성현 시장의 말, 말, 말

"폭탄공장이라고 호도하는 불순세력이 있다." 폭탄공장 착공식외 다수 연설에서 수차례 시민단체를 불순세력(좌파)이라 칭함.

"500명의 고용효과가 있고 논산시민들을 우선 고용할 것이다."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자리, 착공식 등

"논산시에서 어떤 약속도 한 적 없고 특혜도 없을 것이다." 시민대책위와의 면담자리

"사장과 둘이 다니면서 MOU발표 전에 비밀리에 땅을 구입했다."폭탄공장 착공식외 다수 연설에서

논산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1. 비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를 논산에서 만드는 것은 논산시민의 불명예이자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2. 국제적으로 금한 비인도적 살상무기는 폭발이나 화재 등 작은 사고에도 땅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3. 이 폭탄공장에서 화약을 보관하는 자체로도 폭발사고와 사망사고가 난 적이 있는 위험한 공장입니다.
4. 시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제한하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폭탄공장을 유치하는 일에 동조하는 주민들은 어떤 이권이 있는지 스스로 밝히십시오. 이웃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는 일을 멈춰주십시오.

논산시와 시의회에 담당공무원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논산시장은 시민의 평화와 일상의 삶을 위협하고 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을 즉각 멈추고, 모든 문서를 공개하십시오!
2. 논산시의회는 폭탄공장 유치를 통해 논산시민이 얻는 구체적 이익이 무엇이며, 폭탄공장에 어떤 특혜를 주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십시오!
3. 논산시담당공무원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시장의 뒤에 숨어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시민만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복무를 지키지 않으면 시민이 나서 법으로 책임을 묻겠습니다.

〈비인도적 대량살상무기 생산업체 논산입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